선거법 개정안 오늘 부의… 국회 '전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협상 제안에도 한국당 단식 강행하며 패트 철회 요구
민주 "한국당 빼고라도 처리"…한국당 "모든 수단 동원 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 속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민주당은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주일 집중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를 협상 참여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이 계속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른바 '플랜 B'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 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 노력을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로, 이에 대비해 '4+1' 공조를 통한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의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27일 '4+1회담' 1차 모임을 갖고 이견을 조율한다.

한국당은 이날로 일주일째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 대표 단식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총선 보이콧' 빼고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해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색하는 것에 강력히 비판했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기생정당이 획책하고 있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꼼수 야합"이라고 말했다.이들 비당권파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4+1 공조 '선거제 단일안' 나오나

민주, 각당 의원과 개별 접촉 … 의견 좁혀가며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마련,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와 달리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고, 민주평화당 또한 대안신당으로 쪼개진 데다 선거법을 두고도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터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4당의 접점을 찾기 위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를 다소 늘리는 방향의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안(案)이 꼽힌다. 다만 두 개 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개 안 중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표 계산에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2~3개 정도의 수정안을 두고 의견을 모아가면 단일 안으로 좁혀지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100%를 적용하게 되면 다수당은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도 비례대표 의석 증가가 3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하의 '240 대 60' 안이나 연동률을 100%로 적용하는 '250 대 50' 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안신당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의원정수 300석을 넘기지 않고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변혁' 의원 전원 징계 절차

바른미래 윤리위 "창당은 해당행위"

바른미래당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혁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원 외에도 정병국, 이혜훈, 지상욱 등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도 징계위에 회부됐다. 비당권파로, 변혁에 소속된 의원 15명 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

윤리위는 소명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일단 4명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는 원내대표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리위 회부에 대해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며 "(당권파가) 어떤 행위를 하든 이제는 개의치 않고 저는 저대로 의원들이 선출해준 지위를 가지고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로 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 회의… '자치분권 법안 통과' 촉구문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 7기 제2차연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면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는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지방분권 확대를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거나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 출마 선언 본격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20여 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출마 기자회견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진숙(50)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광주 북구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행정관은 "내년 4·15 총선은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존재감 없는 광주정치의 혁신과 변화가 광주시민의 절박한 요구라는 것을 중앙정치에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평등세대 목소리와 시민의 일그러진 일상에 귀를 닫고 눈을 감는 지방의 적폐세력을 정치권에서 일소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남수(49) 국제키와니스 희망클럽회장도 지난 19일 광주 북구을 지역구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하는 이남재(51)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도 12월 9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형배(5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지역위원장은 내달 10일 자치단체장 출신 전 청와대 비서관 3명과 함께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원이(51)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29일 서울시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목포로 내려가 출마선언과 함께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목포 마리아회고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한 김 부시장은 지난 23년 동안 청와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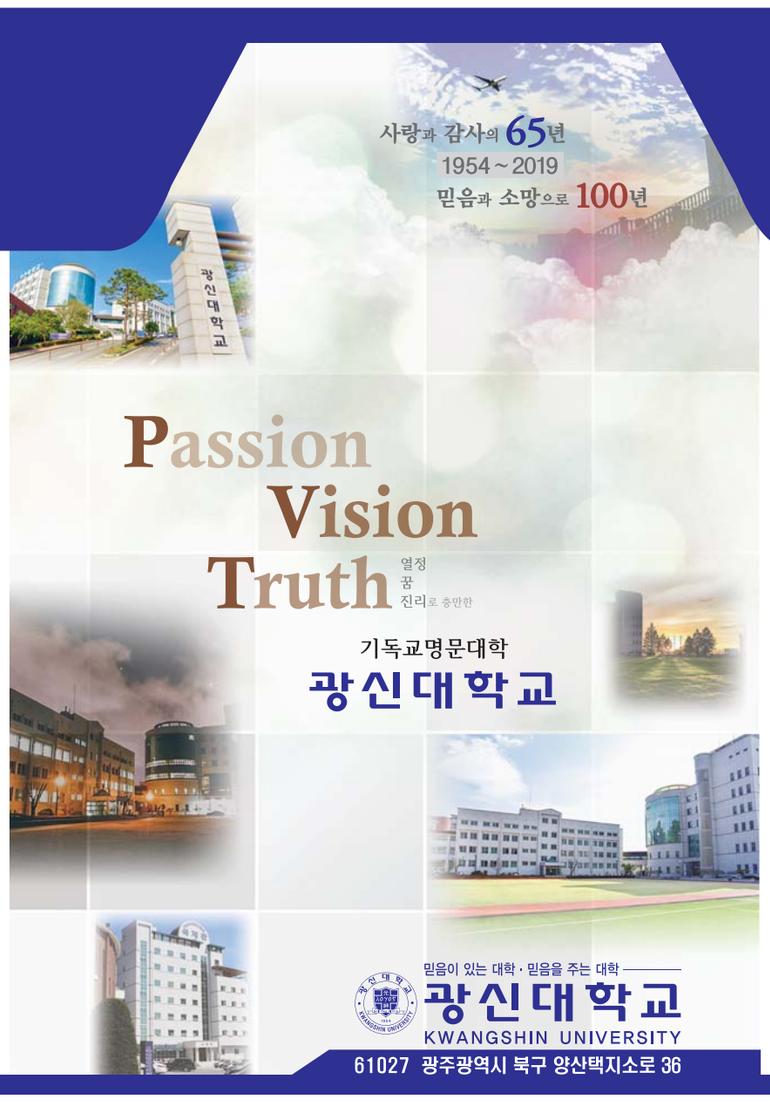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31(화)
· 전 형 일 :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7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